

李 “중동발 위기,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민생경제 지원·에너지 전환 강조
국정 혼드는 가짜뉴스 강력 대응
토허제 신청분 양도세 유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한민국이 중동전쟁으로 전시 상황인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건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면서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는 전쟁 시적군이 쓰는 수법이다. 상대 진영을 교란할 때 제일 좋은 것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소에 장난삼아서 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가짜뉴스 스크리닝 팀’ 신설 등을 언급하며 “신고 들어오는 걸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라도 적발해야 한다. 선제적으로 스크리닝을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고,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다변화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 오일 쇼크를 겪어도 여전히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급체를 다변화해 나가야 한다”며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체계를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며 “관계부처는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9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 4

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재는 5월9일까지 매매 계약이 완료돼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적용되는데, 5월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을 한 경우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허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 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 가능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1주택자도 ‘세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나, 왜 혜택을 안 주느냐’는 반론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에는 소위 ‘깡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는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걸로 판단된다”며 “관계 부처는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클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클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제 21 회

영양

2026

자연이 차려낸 봄의 미식 한 상

기간 | 2026년 5월 7일(목) - 10일(일)

장소 | 영양읍내 및 일월산 일원

주최 | 영양군 주관 | VFTF 영양축제 관광재단

당정 “주유소 사후 정산제 폐지”

정산주기 1주 이내 단축 협의
주유소 ‘전속 구매’ 제도 개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유소 사후 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과 특위 2차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정산 주기는 (기존) 1개월인데, 1주 이내로 단축한다는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사후정산제란,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우선 공급한 뒤 일정 기간 후 국제 기준가격 연동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주유소가 정확한 최종가격을 모른 채 제품을 구입한 후에야 최종 가격이 정해지며, 석유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 제품만 사도록 하는 ‘전속 구매’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정유사와 주유소는 1년 단위로 전속 구매 계약을 체결·갱신하는데, 주유소의 선택권과 협상력을 제약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안 의원은 “(한 쪽 것을 100% 구매하는) 전량 물량을 60%까지 낮추는 방안

으로 주유소와 정유소 간 협의가 이뤄졌다”며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4월 둘째 주까지 합의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안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대체 루트인 흥해 항로에 국적 선사 5척을 투입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갖고 있는 비축유를 우선 민간 정유사에 공급하고, 해외에서 확보한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스왑(맞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나프타(납사) 등 석유화학 원료 수급 문제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50개 주요 업종에 대한 공급망을 일일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납사 수출을 전면 금지했는데, 수출제한 품목을 합성수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피해 기업 지원도 확대할 전망이다. 실제 당정은 이날 나프타 대체 물량 확보를 유인하기 위해 차액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수출 피해 기업의 물류비 지원을 위한 긴급 바우처 255억원을 원안대로 처리하고, 무역보험 관련 예산 규모를 기존보다 3조원 이상 더 확대하기로 했다.

/서예진 기자·박경수 인턴기자



metro

社告

- ② 일자 : 2026년 5월 19일(화)
- ③ 장소 :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 ④ 기타 :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년 5월 22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타
-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02-721-9851)로 문의 바랍니다.